벌이 시원찮고, 빚은 쌓이고… '경기 한파'에 위태

[위기의 자영업]

자영업 대부분 영세업종…경기침체 직격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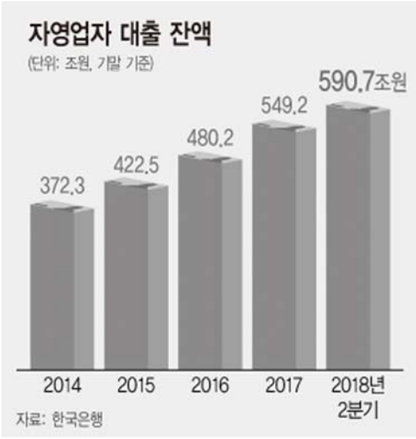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자영업 빚 '부실화' 위험도

자영업자의 벌이는 시원찮은데 빚만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불경기 속 금리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열에 아홉 꼴'로 가게가 문을 닫을 만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앞으로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경우 경쟁에서 밀려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고 대출 부실화까지 이어져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 등의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1년 전 수준(1억189만원)보다 250만원(2.5%) 늘어난 1억439만원에 달했다. 상용근로자(8888만원)와 임시·일용근로자(3350만원)의 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규모는 이미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8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말(549조2000억원) 수준에 비해 41조5000억원(1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4분기에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약 650조원에 다다랐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평균 6365만원으로 전년(6232만원) 수준보다 133만원(2.1%)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같은기간 임금 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평균 5.2%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절반 가량 적게 늘어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권일 경제분석관이 분석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1996년에는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이 근로자 가구에 비해 0.8% 높았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역전된 이후 지속 벌어져 현재 약 2.6~11.3% 정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영세 업종에만 몰려 있는 탓이다. 은퇴를 맞은 50~60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치킨집, 편의점 등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서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가운데 이들 업종의 비중이 약 60%에 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좁은 시장에서 취약한 업종의 자영업자끼리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경기가 더 가라앉는 상황 등이 오면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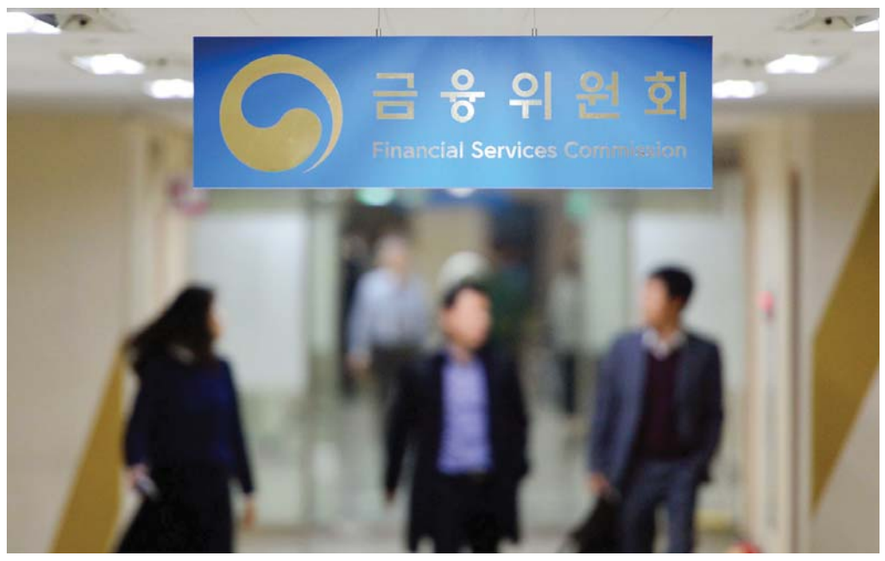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단기 지원책으로 진통제를 놔주는 것 만으로 자영업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실화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수익성까지 악화되면 원리금 감당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규모(LTI)는 지난 2017년말 189%로 2013년말(167%)보다 22%p 높아진 상황이다. 버는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의 매출 부진과 소득 감소 추세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에 개선되기 어렵다"며 "취약 업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벼랑끝 자영업에 2.6조 금융지원…효과 있을까?



연 2% 저금리 1조8000억 대출

6000억 규모 보증지원도 실시

2021년까지 부실 채무 구제도

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다.

연 2% 수준의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담겨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10.4%), 독일(10.2%), 미국(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지만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18.2%, 13.9%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2조6000억원대의 자영업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핵심은 기업은행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가동되는 1조8000억원 규모 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한다. 최근 KORIBOR는 2%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해 공급하면 연간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1분기 중 나온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카드 매출을 기초로 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잡은 셈이어서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창업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네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그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원에다가 연간 2500억~3000억원이 창업·운영자금으로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2조6000억원+α'의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 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차주기준) 연대보증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1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조원대 금융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015년말 274조원에서 2016년 307조원, 2017년말 354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390조원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자영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퍼주기'식 금융지원은 다산다사의 자영업 구조를 더 고착화시킬 뿐이란 비판도 나온다.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뉴시스